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12196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신○○, 차○○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5. 7. 8.
판 결 선 고 2025.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3. 원고에게 한 취득세 114,464,270원 및 농어촌특별세 9,893,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각종 공작기계 및 동 부속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하고, C과 D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는 2018. 5. 1.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이 정한 E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에 해당하였다.

다. B은 2018. 12. 28. C으로부터 C이 소유하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주식 4,797,770주(총 발행주식의 80.99%)를, D으로부터 D이 소유하던 F의 주식 306,690주(총 발행주식의 5.18%, 이하 B이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양수한 F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양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2022. 4. 4. B을 흡수합병하였다(B을 흡수합병한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에 따라 소멸하게 된 B이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원고와 B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 흡수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2. 6. 3.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F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114,464,270원 및 농어촌특별세 9,893,4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이 사건 거래 당시 B과 이 사건 각 회사, F의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B	C	D	F
대표이사	G	H	I	G
이사	J	J	J	J
	K	K	K	L
			M	

사. 원고는 2022. 8.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F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거래 당시 원고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이 사건 각 회사는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F의 총 발행주식에 대한 과점주주 집단의 주식 보유 비율은 변동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관련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명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株式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더라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등 참조).

2) 법인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경영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본인이 법인인 경우 경영지배관계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뜻한다(제2호 나목, 이하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이라 한다). 한편, 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이거나(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가목),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호 나목)에는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



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하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에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경영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먼저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가 E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본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제1조의2 제3항 제2호 라목). 이와 달리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가 E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가목이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가 존재하는 경우를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 역시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자회사에 준하여 임원이나 사업방침을 결정할 수 있어 당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가 단순히 동일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라는 점 이외에 서로 간에 임원이나 사업방침을 결정하는 등으로 경영을 지배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전후 무렵 J이 계속하여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의 이사로 재직해왔고,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는 동일한 E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므로, 위 J이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에 해당 법인의 경영에 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원고 또한 J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회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6, 7호증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법인 본인'이어야 한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체가 되어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같은 호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는 비록 E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나, 서로 전혀 다른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 또는 이 사건 각 회사가 주체가 되어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거래 무렵 J이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 모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 F의 이사회 회의록으로, 위 자료들만으로는 J이 원고나 이 사건 각 회사, F 각각의 임원 임면권 내지는 관련 사업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자료들을 통해 J이 원고나 이 사건 각 회사, F 각각의 임원 임면권 내지는 관련 사업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7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2조 제3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 중 경영지배관계에 '본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라목)을 추가하였고, 위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2호는 경영지배관계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므로, 위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의 개정 취지와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중 동일인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계열회사 상호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엄격해석 원칙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의 규정 내용과 같이 본인인 법인(A)이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B)를 통하여 어느 법인(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A)이 가목 관계자 등(B)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등으로 본인인 법인(A)이 어느 법인(C)에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의 문언상, 위 조항은 본인인 법인을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 주체로 상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 본인이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자를 통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리고 ㉢ 가목 관계자를 통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부사인 '또는'으로 연결함으로써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 주체가 본인인 법인임을 전제로, 단지 그 행사 방식 및 수단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 형식에 '통하다'의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사람을 매개로 하거나 중개하게 하다'인 점을 더하여 보면, '가목 관계자 등을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란, 가목 관계자 등(B)이 본인(A)의 어느 법인(C)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중간에서 단지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본인(A)이 어느 법인(C)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가목 관계자 등(B)이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본인(A)과 어느 법인



(C)에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본인(A)이 그 법인(C)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 조항과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항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2호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
경영지배관계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라목에 해당하는 부분 없음)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 조항에 비하여 본인이 법인인 경우의 경영지배관계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 조항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을 특수관계인으로 포섭한 반면,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은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각 대기업마다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현실상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회사를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에 포함시킬 경우, 대기업의 계열회사 간의 주식 양수도 거래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고려하여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 및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위와 같은 입법 태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가목 관계자를 매개로 한 횡적 계열에 있는 법인으로까지 넓혀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 조항 라목을 참고하여 그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해석은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의 전체적인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가 구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5.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17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판사 김○○

판사 최○○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총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



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7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끝.